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Ⅲ.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1. 05. 30 (月) 14:3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프레스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신제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성근 연세대학교 교수

김태준 금융연구원 원장

헤럴드경제 정책세미나 - 2011년 5월 진행(案)

1. 시 기 : 5월 30일(월) 오후 2:30 ~ 4:00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프레스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ERI)
3. 大주제: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小주제: ③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例示)	발표자
주제 1	10분	- 위기 이후 한국금융의 진로 :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 .G20회의 前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금융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신제윤 부위원장(금융위)
주제 2	10분	- 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방안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경제적 부작용(한국 사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론적 접근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한 과제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하성근 교수(연세대, 한국경제학회장)
주제 3	10분	-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세계 속의 위치) .글로벌 경쟁력 부족의 원인과 개선 방안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김태준 원장(금융연구원)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HERI 원장)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1. 위기 이후 한국금융의 진로 :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

신 제 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 G20회의 前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 G20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금융부문 개혁'을 핵심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결과 금융부문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

⇒ 특히 향후에는 '실물경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자로서의 금융'의 역할이 강조될 전망

1.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

□ (G20 以前) 금융기관간·금융시장간 상호연계성 및 금융의 경기순응성 등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

*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급속히 확산

□ (G20 以後)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기준을 도입하고, SIFI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규제를 부과

2. 규제·감독의 사각지대 축소 → 금융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G20 以前)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회계기준 등은 당국의 규제·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영역(시장의 자체규율 중시)

* 복잡한 금융상품, 신용평가의 부정확성 등이 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

- (G20 以後)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감독 및 구조화된 금융상품·신용평가사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추진
 - 또한, 은행세 등과 같이 금융권의 책임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3. 금융 규제·감독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G20 以前) 금융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통합(integrated)되는 추세였지만, 규제·감독은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진 상황
- (G20 以後) G20, FSB 등 국제공조를 통해 기 합의된 금융규제 강화방안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전망

Ⅱ. 최근 대내외 여건

- ◇ 위기 이후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호조세 지속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 IMF '11년 세계경제 전망(%): global(4.4), 선진국(2.5), 후진국(6.5)
- ◇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로존 재정위기, 국내 가계 부채 및 부동산PF 문제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상존

< 대외적 요인 >

1. 국제자금흐름의 급변동 가능성

- 위기극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투입된 막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과 성장세를 보이는 신흥국가로 이동
 - * 신흥시장국 자금유입 규모(IMF): (09)5,814억\$ (10)8,250억\$ (11)8,335억\$^e
- 선진국의 경기회복 및 유동성 환수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급격한 자금이동으로 대외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

2. 글로벌 인플레이션

- 위기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 경기호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증가 및 MENA 지역 정정불안(유가 급등) 등이 주된 요인
 - * 세계 석유공급의 약 38%를 차지하는 MENA 지역 정정불안으로 유가 상승세
 - * 주요 원자재 가격상승률(전년말비, %)
: CRB Index(11.4), Dubai 원유(31.0), 금(9.4), 옥수수(19.9), 알루미늄(12.5)
-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및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3.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 유로존 재정위기, 지진후 일본경기 둔화, MENA 지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
- 다만, 이슈화되는 시점마다 금융시장에 일부 충격은 불가피

< 대내적 요인 >

1. 가계부채 문제

-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00~'09년중 연평균 13.1% 증가하여 동기간 경상 GDP 증가율(6.8%)을 상회
- * '10년말 현재 가계부채는 795조원(가계대출 746조원+판매신용49조원)
- 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최근까지도 가계부채가 증가 → 금리상승시 부실화 가능성
- * FT(4.12)는 변동금리 위주 대출 등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지적

2. 부동산PF 문제

- '10년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66.5조원 수준으로 '09말 대비 축소(△15.9조원)
-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부진,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PF대출 부실이 증가될 위험
- * 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 등 여타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있음

3. 단기외채 증가

- 최근 조선사 선물환 매도, NDF 매도 등으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증가 →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 증가
 - 또한, 금년 들어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일명 김치본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외화차입 증가요인으로 작용
 - * '외화대출 용도제한'(10.6월) 등 원화사용 목적의 외화조달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 발행이 증가

4. 저축은행

- 일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건전한 저축은행 및 금융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
 - 저축은행의 再부실화 방지를 위한 검사·감독시스템 정비 필요

Ⅲ.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가계부채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전 방위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 요인 상시점검을 통해 위기를 사전예방
- ◇ 또한,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및 금융의 실물부문 지원 등을 강화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

< 금융 안정기반 강화 >

1. 가계부채 문제

-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 등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포함하여 전 방위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
 - 장기·고정금리 확대,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여 차주의 상환위험을 완화
 -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 강구 등
- 한편, 가계부채 축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
 -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제도 등 3대 서민우대금융 제도 보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4.18)

2. 부동산PF 부실대응

- 5.1일 기 발표한 「건설사·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bad bank)」를 활용하여 정상화 추진
- KAMCO 구조조정기금(4.5조원)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
-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확대('10년 5천억→'11년 1.5조원)

3. 선물환포지션 규제 및 김치본드 규제방안 마련

- 외채 증가,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고, 분기별로 한도 조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 * 외은지점 비율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 비율한도는 50%에서 40%로 축소(5.19일 발표)
- 은행들의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투자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4.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
-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중 7개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기간 내에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각절차를 병행
-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상(0.35%→0.40%), 예금보험기금 계정 등 구조조정 재원 및 유동성 확보장치* 마련
 - * 정책금융공사와 은행의 지원(2조원), 증권금융 지원(1조원)

- 또한, 지난 3.17일 마련한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고위험 자산운용 제한, 경영공시 확대 등 건전경영 기반 구축

5.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 상시점검

- 업권별 점검과 더불어 경제·금융·실물부문 리스크 요인 점검을 통해 위기징후를 감지하고 선제적 대응조치 강구

- 특히, 대내외 쏠림현상 발생 소지, 과도한 leverage 투자 등을 중점 점검

<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

-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추진 사항

- 최근 국내시장 내의 치열한 경쟁, 외국계 회사의 진출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음

- 또한, 금융산업이 국제화될 경우 실물 부문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

*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이 많은 편

-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임

*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자산 비중은 3.5%(10.6월)에 불과(미국 상업은행 11.7%)

* 증권(10.3월 0.5%), 생명보험(10.9월 0.11%) 등 여타 부문은 더욱 취약

- 따라서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해외진출을 최대한 장려할 계획임
 - * 현재 법령에서 대부분 업권의 해외진출은 금융위에 사후보고로 규정
 - 금융당국자 간 회의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에 힘써 해외영업 관련 현지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
- 대신 정부는 해외진출 부문의 위험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할 계획
 - 금융기관의 역량, 진출국가 리스크 요인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한 해외점포의 단기외채 등 건전성 실태 등을 관리
- 우리 금융기관들도 해외진출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출시장 및 진출영역*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
 - * 호주 Macquarie 은행은 해외시장 진출시 틈새시장인 인프라 금융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 또한, 현지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지법인과의 M&A 및 지분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

< 금융의 실물부문 지원 강화 >

- (대형 해외프로젝트) 우리기업들이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 정책금융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지원 강화

- 민간차원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소요될 자금조달 중개 및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IB 육성을 추진
- (신성장산업) 초기 산업인 신성장분야 특성에 맞게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추진
 - 초기 R&D·사업화 단계에서는 On-lending 대출, 기술평가 보증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 * 기보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 : ('10년) 2.9조원 → (13년 계획) 3.7조원
 - 성장·성숙단계에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 제공 및 투자자금 회수 장치 강화 등 민간금융 활성화 추진

< 자본시장 발전 >

- (IB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위험인수 등 국내 IB 기능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 민관합동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시장친화적(bottom-up)방식으로 제도개편 추진
 -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헤지펀드 육성) 헤지펀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및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
 - 헤지펀드로 인한 위험과 투기적 행위는 면밀히 감시·감독

2. 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방안

하 성 근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11년 만에 다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아 여러 경제 주체들이 많은 비용과 고통을 치렀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대응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빠르게 위기 상황에서 헤쳐 나왔다. 미국과 유럽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는 처음 맞는 초대형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충격을 야기하였고 그 파장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진행 중이다.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구제금융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 다른 국가로 전이될 지 어떨지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는 거액의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가파른 원화절상, 금리왜곡, 과잉유동성 문제의 악화 등과 같은 크게 부담스러운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의 외국자본의 유입쏠림 현상은 과도한 가계부채, 양극화심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등과 같은 한국경제의 대내적 취약요인이 심화되고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대내적 취약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외국자본 쏠림이 결국 두 차례 위기가 반복되었던 핵심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금융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경제와 같은 소국개방경제에 있어서 과도한 금융개방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본통제 등 적극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작년 6월에 와서야 정부당국은 지나친 개방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일련의 개방제한조치(선물환 매도에 관련된 단기외화차입규제, 외국인채권과세환원, 은행세 부과 등)를 내렸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상당히 낮은 단계의 제한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의 유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방적 개방 가속화와 일방적 자본유출입이 다시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에서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2. 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방안

것을 막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장치를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국은, 한국 금융시장이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 방향 위주의 개방 구조'에서 국내자본도 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양 방향 구조'로 전환하는 과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기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과도한 가계부채, 양극화심화, 만성적인 과잉유동성,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등과 같은 한국경제자체의 대내적 취약요인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유효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I> 한국의 위기반복경험과 대외충격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행태에 휘둘려 두번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였다.

< 표 I-11 >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유입기 (95.1 ~ '97.10)	IMF 외환위기 (97.11~'98.3)	유입기 ('98.4~'08.8)	글로벌 금융위기 (08.9~'08.12)	유입기 (09.1~'10.4)
자본유출입규모	781	-214	2,219	-695	816
외국인주식투자	134	21	8	-76	366
외국인채권투자	386	-16	1,238	-134	310
단기차입	261	-220	973	-487	140



자료 : 기획재정부(재인용)

1997.10 이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자본자유화의 급진전으로 외국인 주식, 채권투자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외화차입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IMF위기(1997.11~1998.3)시에는 단기차입금 유출(220억불) 등으로 외화유동성위기를 경험하였다.

2. 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방안

그리고 외국인 자금은 그 후인 1998.4~2008.8월에는 2,219억불 유입되었으나, 2008.9 ~ 2008.12월에는 695억불이 (이중 단기차입이 70%를 차지) 유출되었다. 한편 글로벌 위기 극복 속에서(2009.1월 이후) 국내 경기 회복이 빨라 주식, 채권 등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어 외화유동성이 급증하였다(816억불 유입).

금융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은 45개 주요국 중 11위이며, 22개 신흥국 내에서는 6위 수준(2008년 기준)을 나타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중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 증가하였다.

< 표 1-13 > 한국의 자본수지 변동성 순위

	45개 주요국				22개 신흥국			
	'00	'05	'07	'08	'00	'05	'07	'08
자본수지	18	41	32	11	8	21	15	6
포트폴리오투자	26	41	29	20	9	20	7	5
기타투자수지	18	41	39	19	3	18	16	3
은행	25	30	32	14	8	9	11	2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재인용)

한국에서의 외국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큰 이유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과 실물부문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무역의존도는 세계 1위임). 특히 유별히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한 무역 관련 외화자금의 유입, 유출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역 의존도(09년, %)의 국제비교>

(한) 82.4, (일) 22.3, (미) 18.7, (중) 45.0

<금융 개방도를 나타내는 자본접근성지수(capital access index, 미국 밀켄 연구소집계지수)의 국제비교>

(한) 7.39, (일) 6.72, (미) 7.88, (중) 6.00, 독(6.84), 불(6.99)

2. 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방안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은 전면적으로 허용된 반면, 내국인은 국제시장에서의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주로 내국인은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금융투자의 능력과 경험이 없는 사실에 기인한다.

결국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이러한 한국 경제에 환율 변동폭 확대, 단기외화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아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조성시켜 왔다.

특히 국제자본의 과다 유출시에는 국내시장의 외화공급을 위해 정보 보유 및 외환보유를 감소시켜야 하고, 과다 유입시에는 국내시장의 외환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채권(통화안정증권 등)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금리 상승 부담이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던 정부 보유 외환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 공급을 위해 감소세를 보였고, 금융위기 극복이후 글로벌 자본 유입기인 2009년~2010년에는 통화안정증권-이하에서는 통안증권 혹은 통안채-의 발행이 급증하였다(별첨1 참조).

< 표 1-14 >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구 분	'96	'97	'98	'00	'07	'08	'09	'10.11
외환(기간말)	32	19	52	95	262	200	265	285

자료 : 기획재정부

< 표 1-15 > 통안증권 잔고 추이

(단위 : 조 원)

구 분	'06	'07	'08	'09	'10.8
금액(기간)	158.4	150.3	126.9	149.2	163.1

자료 : 한국은행

특히 통안증권의 잔액은 2000년대에 와서 그 증가 추세는 높아져 2006년말 158조 3900억에 이르렀으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외부문 통화 축소로 인해 그 잔액은 126조9372억원으로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위기 파장이 잦아든 2009년부터는 통안증권 잔액은 다시 크게 증가되어 2010년에 들어 본원통화 잔액의 2.3배 되는 163조 87억원에 이르렀다.(하성근, 2008및 별첨 1 참조). 이렇게 다시 확대되고 있는 거액의 통안증권은 통화당국의 유동성 통제력약화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기대심리확대, 금리왜곡, 중앙은행 수지 적자확대에 따른 정책신뢰성의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자금 흐름의 급변시에는 중앙은행이 금리조절을 단행하여도 외국 자본의 국제 매매 쏠림으로 인해 국제금리는 이탈되어 나타 나는 디커플링 현상을 야기 할 수 있다.

결국 글로벌 과잉유동성의 추세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글로벌 불안요인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통화환수잔고 등으로 당국의 정책적 대응 수단이 점차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할 때, 향후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쏠림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 II> 외국자본 유출입 안정화 장치(안)

1. 외국자본 과다차입 규제정책

(1)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최근(2010년 6월) 당국은 은행별로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포지션을 일정 비율(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에 따른 과다차입의 문제와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급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은행부문 단기외채는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2010년 6월말 1,165억불에서 그해 10월말 1,111억불로 54억불 감소)

< 표 IV-1 > 은행부문 단기외채 현황

(기말 기준, 억불)

	'09년	'10.6월(A)	'10.9월	'10.10월 ^o (B)	증감 (B-A)
단기외채	1,492	1,498	1,466	1,430	-68
은행부문 단기외채	1,157	1,165	1,145	1,111	-54
국내은행	437	460	484	471	11
외은지점	720	706	661	640	-66

자료 : 기획재정부

그러나, 사안별이 아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양적 규제는 지나칠 경우 정상적인 헤지거래를 저해(수출업자의 헤지 제약)하거나, 규제를 회피한 해외에서의 편법적인 운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적인 한도 규제는 투기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에서도 위탁자 1인당 파생상품 미결제약정을 제한하고 있다.(지수선물 7천 계약, 국채선물 5천 계약). 이는 다수 계약보유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정당한 헤지 또는 차익거래의 경우 그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선물환 및 선물시장에서의 포지션 한도관리는 그 비율 또는 계약수의 조절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나, 정당한 경상적 또는 헤지거래 등에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은행세(거시안정부담금)도입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의 본격적인 대응 장치인 토빈(Tobin)세 등의 제도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된 후 각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은행부과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영국)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12.9)하였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독일) 은행부과금 도입을 위한 은행구조조정법안에 대해 대통령 서명 및

2. 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방안

공포를 완료(12.8)하였고 내년 1월부터 시행

- (스웨덴)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정리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09.12월 은행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부터 기시행
- (프랑스)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재정법안에 대해 금년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표 IV-2 > 주요 국가별 은행부과금 개요

	영국	독일	프랑스
부과 대상 기관	은행 및 은행그룹	은행	은행
부과 대상	비에금부채	비에금부채	위험가중자산
부과요율 (%)	0.05 ('11년), 0.075 ('12년 이후)	0.02~0.04	0.25
연간 부과 규모	약 25억 파운드	약 8~15억 유로	약 5억 유로
활용 방안	재정 확충	정리기금	재정 확충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다 최근에 (2010.12.19) 우리 정부에서도 거시경제의 건정성 제고 차원에서 유사한 형태의 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2011년 상반기 관련 규정 정비 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첨부 4 참조).

이번에 제시된 부담금도입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예금 외화부채의 만기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 하여 단기인 경우 에는 높은 부담금을 적용시키고 장기인 경우에는 낮은 부담금을 적용하는 차등요율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부과요율을 이미 도입하기로 한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부과 수준에 준하여 0.05%내지 0.2%를 상정하였다.

햇머니를 우선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등 요율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무역의존도나 금융개방도가 낮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보다는 높은 요율을 책정하는 것과 개별은행의 외화차입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때는 보다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차등 방식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이러한 부담금 부과는 과도한 은행의 외화 차입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거래에 대한 규제정책

(1) 투자자의 대량보유 신고

현재 주식시장의 경우 적대적 M&A제도 도입과 함께 대량보유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선진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량보유신고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파생상품의 특성상 대량보유를 통한 기초상품시장 교란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대량보유신고제도는 규제자의 직접적 시장개입 없이 참가자의 부담을 통하여 불공정거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2) 채권투자 과세정책

그간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 투자자의 경우 개인에게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겐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시 또는 중도 매도시 보유기간별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한편 자본의 국제적 이동 증가로 인한 국가간 자본유치 경쟁 속에 외국인의 국채 투자(국채 및 통안채)에 대하여 '09. 5월부터 최근까지 이자 및 자본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 왔다.

< 표 IV-3 > 개인·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에 대한 과세 요약

구분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적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대상	표면이자 (분리과세 가능)	표면이자 + 자본차익 ^{주)}
원천징수여부	표면이자에 대해 모두 원천징수 (보유기간 과세)	
원천징수세율	14% (소득세의 10% 주민세 추가)	14%
원천징수방법	이자지급 또는 중도 매도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원천징수자	· 중도 매도시 : 원칙은 매도자가 원천징수 (다만, 개인 매도시에는 매수법인이 원천징수) · 이자 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외국인 특례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취급 (다만, 국채·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주) 법인 결산시, 법인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

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금액이 '06년 4.6조원(보유비중 0.6%)이던 것이 '10년 79.0조원(7.1%)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표 IV-4 > 외국인 채권 순투자 규모

(단위 : 조원)

외국인거래	'06	'07	'08	'09	'10(10월)
순투자	1.2	31.7	0.5	18.5	21.2
보유액	4.6	38.4	37.5	56.5	79.0
보유비중	0.6	4.6	4.3	5.6	7.1

자료 : 한국거래소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비중확대는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따른 투자유인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외화차입에 보다 유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차익거래 유인도 그 주된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은 자산가격의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외국자금의 일시적 유출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채권투자 비과세를 폐지한 최근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향후 해당세율은 외국자본의 쏠림정도와 외국의 과세수준을 참고하여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별첨 3 참조). 그리고 차익거래유인이 과도할 경우 김정한 등(2010)이 제안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채권및 스왑거래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추가적인 거래세부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증권투자의 과도한 쏠림에 대한 추가억제장치

외국인증권투자의 과도한 쏠림 행태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도 앞으로 더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브라질에서 도입한 '토빈(Tobin)세'나 대만에서 시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예금 제한제도' 등의 조치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한국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보다 더 큰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 급격하게 전개되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출 위험에 대한 대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상수지 흑자의 확대나 장기 외국자본 유입 증가를 유도하면서 앞으로 계속 정부와 민간의 외화보유액을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III> 민간부문 경제주체의 외화보유확대의 필요성과 그 추진방안

앞으로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 보유를 크게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은행들로 하여금 외화 차입 규모를 줄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각종 외화예금을 더욱 늘려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화가 싸질 때 외화를 매입하고 외화가 비싸질 때 외화 매각을 유도하는 구조를 가진 외화예금이나 외화펀드를 개발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런 금융상품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센티브는 내국인들이 외국인들과 같은 국제금융투자 경험과 능력에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화상품의 보유 확대는 국내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제업무능력 제고 그리고 나아가서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추진중인 은행 부담금 부과조치에서 얻어지는 재원 중 일부를 이러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시 강조 되어야 할 사항은 내국인이나 내국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은 외화가 싸질 때 외화를 매입하고 외화가 비싸질 때 외화 매각을 유인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어야 그것의 확대가 외환시장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및 채권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위험하다(김정한 등, 2010). 왜냐하면 이들의 외화보유의 단순 확대는 추후에 환율변동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3.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김태준 (금융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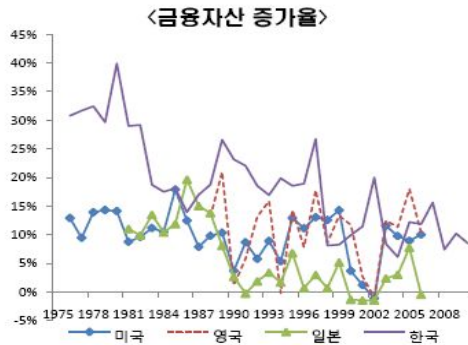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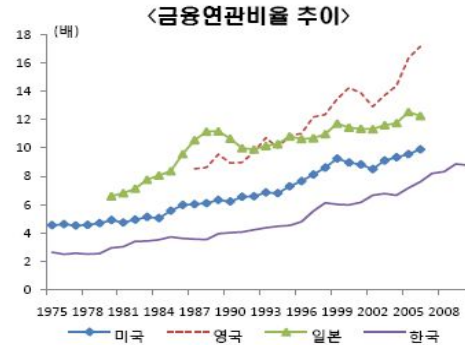
- I.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
- II. 글로벌 경쟁력의 취약 요인**
- III.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 IV. 결론**

금융자산 추이

- 우리나라의 금융자산과 금융연관비율은 빠른 증가 추세를 시현
 - 고도의 경제성장과 노동인구 증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의 증가율이 높은 편
 -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금융자산의 규모는 차츰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선진국의 1980년대 수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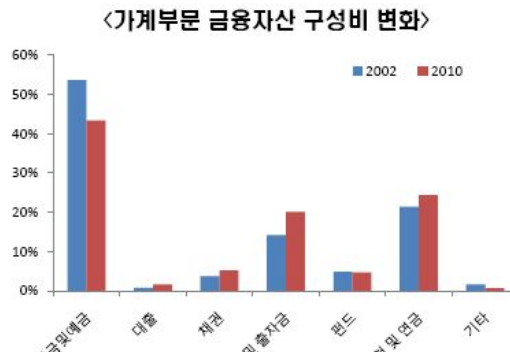
주: 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잔액 / 명목GNI

민간부문의 해외금융자산 구조

- 민간부문의 금융자산이 축적되면서 금융시장 발전이 촉진
 - 해외자산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예금의 비중이 줄고 주식 및 보험, 연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차츰 선진형 구조로 전환되는 모습



자료: 한국은행
주: 거주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외화금융자산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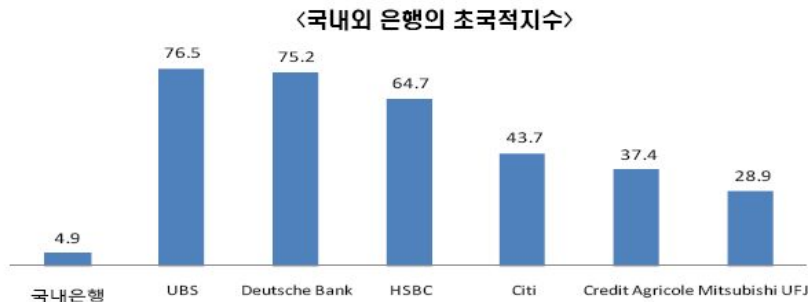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은행의 글로벌화

▪ 국내은행의 국제화는 글로벌 선진은행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

- 초국적지수(TNI, transnationality index)는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해당기업의 해외자산/총자산, 해외수익/총수익, 해외직원수/총직원수 등 세 가지 지표의 산술평균
- 국내은행의 초국적지수는 4.9로 UBS(76.5), Deutsche Bank(75.2) 등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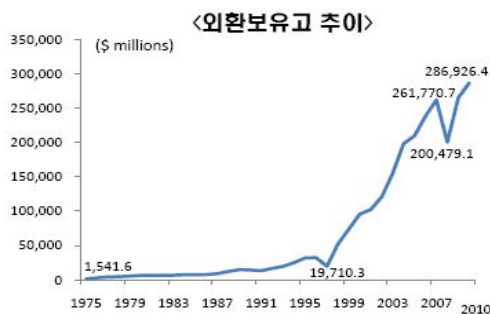


수 : 국내은행은 2010년 6월말, 해외은행은 2006년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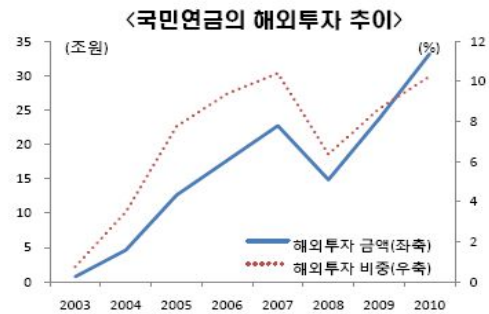
공공부문의 외화자산 투자 추이

▪ 공공부문의 외화자산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

- 두 차례의 외화유동성 위기를 거치며 외화유동성 안전판으로써의 외환보유고의 중요성이 부각
- 축적되는 연기금 자산에 비해 협소한 국내 유가증권시장 규모,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



자료: 한국은행, 외환 기준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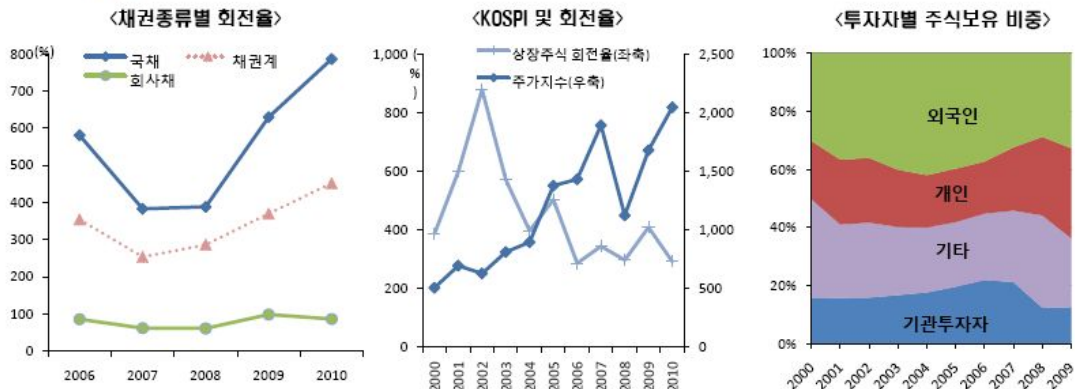
<참고> 은행의 수익력 약화 원인

-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 국내시장에서의 과열 경쟁
- 수익원이 다변화되지 못하여 수익구조가 단순
- 은행간 사업구조의 비차별성
- 취약한 전문인력 기반
-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전략
- 신상품 및 새로운 수익원 개발 능력 취약

출처: 이병윤, “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표자료, 2011. 5. 24

자본시장의 개방

- 자본시장은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도 증가
 - 10년 사이 KOSPI 시가총액(6.1배)과 채권발행 잔액(2.6배)이 크게 증가
 - 외국인투자자의 보유/거래 비중이 높아졌으며,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증대
 -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금의 이동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연계되는 측면도 존재



국내 금융회사의 규모

▪ 국내 금융회사는 글로벌 리더에 견줄만한 규모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함

- 규모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전문인력, 평판 등 질적 요인에서도 차이가 존재
- 규모 측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유인은 아직까지 잔존

은행		IB		생보사
Global	Asian	IPO	M&A	Global
1. BoA 160,388	1. HSBC 93,795	Morgan Stanley 66.3	Morgan Stanley 448	1. Japan Post 198.7
2. JP Morgan 132,971	2. Mitsubishi 77,218	Goldman Sachs 53.4	Goldman Sachs 442	2. Assicurazioni103
3. Citigroup 127,034	3. Bank of China 73,667	JP Morgan 49.5	JP Morgan 381	3. AXA 80.3
4. RBS 123,859	4. China CBC 71,974	BoA Merrill 40.6	Credit Suisse 353	4. Nippon Life 66.6
5. HSBC 93,795	5. SumitomoMitsui46,425	Citi 33.0	Barclays 323	5. Met Life 55.1
...
69. KB 14,332	17. KB 14,332	한국투자 1.43	KPMG삼정 9.7	19. 한화생명 24.8
71. Woori 14,281	19. Woori 14,281	신한투자 1.30	우리투자 4.3	20. 삼성생명 24.4
		대우증권 1.06	신한투자 3.6	

주 : 2009 기준 Tier 1 자본, million USD 주 : 2010 기준, billion USD 주: 2009 수익 기준, billion USD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음

- IMD, WEF 등의 평가기준에 다소 편의(bias)가 있는 점은 감안

〈IMD 발표 금융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 순위〉

항목	기준년도	세계 순위
은행자산/GDP	2010	26
금융서비스의 비즈니스 지원 수준	2011	40
금융기관의 투명성	2011	38
금융규제의 효율성	2011	41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수준	2011	26
주식시장 시가총액/GDP	2009	16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201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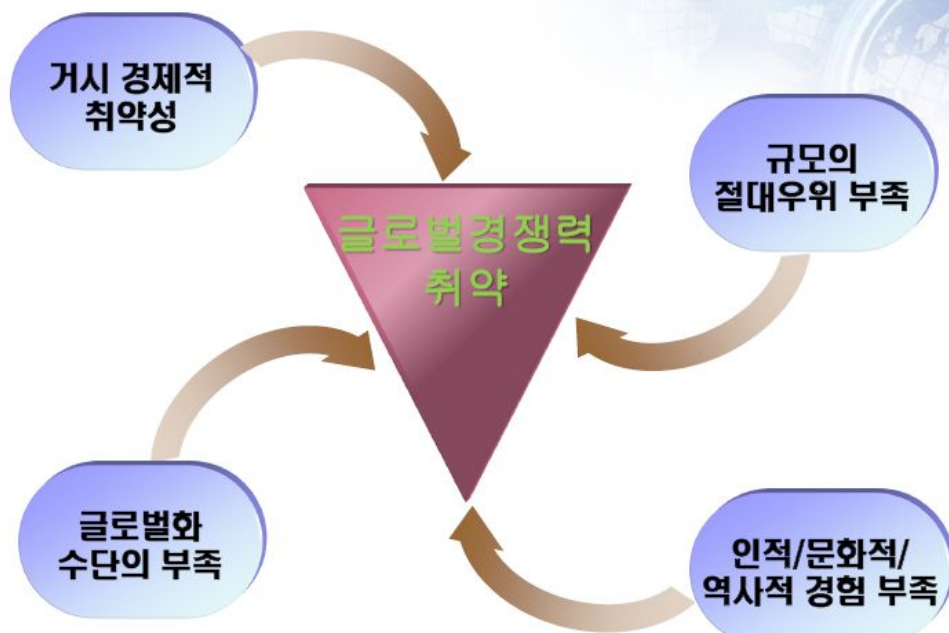
〈WEF 발표 금융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 순위〉

항목	2010년 세계 순위
금융시장 성숙도 (총괄 지표)	83
금융서비스의 이용가능성	98
금융서비스 구입여건	82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59
대출의 용이성	118
벤처캐피탈의 이용 가능성	98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94
증권거래관련 규제	75
법적 권리 지수	39

목 차

- I.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
- II. 글로벌 경쟁력의 취약 요인
- III.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 IV. 결론

글로벌 경쟁력 취약의 원인



거시경제적 취약성

▪ 거시경제 및 통화적 관점에서의 한계

- ▶기축통화 혹은 결제통화의 역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현지조달 혹은 역외조달의 경우 조달비용이나 유동성 확보에 있어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 실물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는 금융부문의 독립적 역할을 제한

- ▶수출경쟁력, 기술조달,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해외시장에 주로 의존
- ▶외부지향적 경제는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규모의 절대우위 부족

▪ 국내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수준은 아직까지 top-notch player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인접국가(중국, 일본)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움
- ▶Middle Player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비전과 목표를 고려

▪ 경쟁적 측면에서도 글로벌 선도은행과 직접적인 경쟁(neck-to-neck)은 곤란함

- ▶국제화의 전략이나 방향, 지역 등에 있어서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적 개선 노력도 요구될 전망

인적/문화적/역사적 경험의 부족

- 국내시장 중심의 경영진 체계를 감안할 때 국제화 자체를 직접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어려움
 -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확대는 제한적임
 - 금융업무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일부 joint venture와 global partnership을 통한 역량 제고를 추진해 왔으나 일부 업무 혹은 업종을 제외하면 가시적인 성과는 없음
- 향후 과제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있음
 - 금융부문의 R&D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 신세대 금융인력의 육성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금융관련 전문 직업교육기관의 고도화에 대한 관심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global capability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예: Swiss Financ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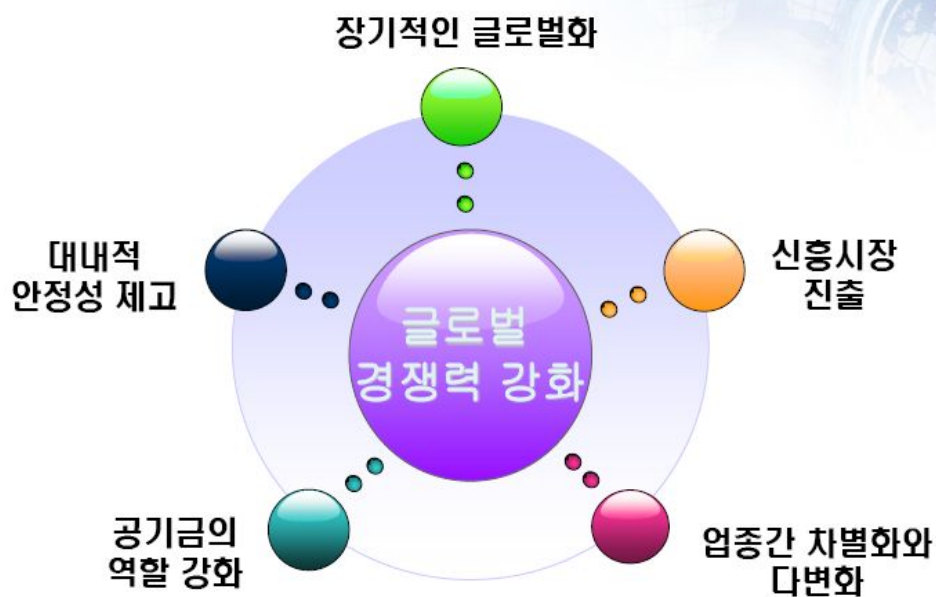
글로벌화 수단의 부족

- 국내 금융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리딩 플레이어의 부재
 - 규모, 업무기반, 역량 측면에서 글로벌 선도그룹에 속할 수 있는 player는 아직까지 부재
 - 양적 요건뿐만 아니라 질적 요건을 갖춘 리딩 플레이어의 육성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필요로 함
- 글로벌 고객기반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
 - 국내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국 현지화 또는 M&A를 통해 국내기반과 전혀 다른 고객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진출에 있어서도 중국계 금융회사와 비교할 때 규모나 지역, 업무 및 업종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소극적 방식이 불가피할 수 있음
- 글로벌화 수단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점진적, 단계적,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목 차

- I.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
- II. 글로벌 경쟁력의 취약 요인
- III.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 IV. 결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기본적인 방향

- **Proactive attitude but slow & steady approach**
- **기존의 성과는 적극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필요**
 - 현 상황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글로벌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국제화의 성과는 단기적 차익을 목표로 할 수 없음
 - 효과적이고 실질적, 안정적인 요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global exposure를 확대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신흥시장진출

- **신흥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확대**
 - 기대효과 못지 않게 위험(손실)도 높은 상황
- **신흥시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기반과 경영역량 필요**
 - 전략적 기능, 리스크 관리, 회계 및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 측면의 리더쉽 필요
 - 글로벌 경영관리 체계는 수용할 필요(consulting 혹은 외국전문가 (expatriates) 활용)

업종간 차별화와 다변화



공기금의 역할 강화

- 금융글로벌화는 자본력과 투자력에 의해 결정
 - 국내 금융산업의 자본력과 투자여력은 선진시장에 비해 다소 미흡
 - 다만, 연기금의 투자여력 활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부문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
- 연기금은 국내 금융자본 육성과 더불어 글로벌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연기금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글로벌화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연기금의 금융자본적 역할은 긴요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함
 - KIC, 외환보유고, 국민연금의 금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함

대내적 안정성 제고

- 장기 관점의 글로벌화는 대내적 경영안정성의 확보 없이 지속될 수 없음
 - 경영상 경험과 지식, 행태, 전략 등은 국내시장 위주로 이루어졌음
- 국제적 경영패러다임의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 자산운용/증권/IB 부문의 경우 핵심업무에 있어서 global professional을 활용하고 있음
 - 리스크 관리 혹은 회계, 감사 등에 있어서 해외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통제기능(control tower)을 계속 강화해야 함

목 차

- I.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
- II. 글로벌 경쟁력의 취약 요인
- III.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 IV. 결론

맺음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개방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거시경제적 측면이나 금융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국내시장의 포화 상태 극복과 수익기반 다변화 및 차별화 강화, 금융자산의 효과적인 관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산업의 국제화는 불가피함.
-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장기적이며 단계적인 접근을 지속하되, 미들마켓(middle market), 업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식, M&A의 활용 등을 통해 global exposure와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함.
 - 특히 전략,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영역량의 확보,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 글로벌 전문인력의 육성(R&D) 강화에 초점을 둔 기존 전략을 여전히 지속할 필요가 있음.